

【논평】 사드 관련 한중 당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10월 31일 한중 당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드 문제에 관한 협의 결과의 요지는 ▲양국의 기본 입장(한국 : 북핵 미사일 방어 및 제3국 겨냥 부인, 중국 : 사드 한국 배치 반대)을 확인하고, ▲중국 측은 한국 입장 표명 유의 및 적절한 처리를 희망하며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 통해 사드 문제를 소통할 것과, ▲중국의 (미국)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천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고, 현재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 우리는 이 같은 협의 결과가, 사드 배치를 굳히려는 미국의 요구와 사드 한국 배치로 미국이 MD에 참여하여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의 요구를 봉합한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결과는 당장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을 덮을 수는 있어도,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 성명에서 확인되었듯이, 한미일은 미사일방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작전, 정보, 군수 등의 분야에서의 군사협력도 보다 강화되고 있다. 미국 MD 참여의 결정판이라 할 SM-3 도입도 한미 양국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군

사협력과 MD 참여 등으로 인한 갈등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 경우 한국에게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3. 사드 배치 문제는 일시적인 봉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군비 대결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평화·안보·주권을 위협한다. 배치 결정과 이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적폐인 사드 철회에 대한 주민과 국민의 요구는 한결같다. 이에 한미 당국이 SCM을 통해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것임을 확인한 만큼, 사드 가동과 공사부터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영향, 절차적 정당성, 주민 및 환경 피해 등에 대해 원천 재검토해야만 한다.

4. 따라서 우리는 한중 간의 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시 배치된 사드의 가동 중단과 철거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드 철거 평화정세의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한 길이며, 동북아의 대립구도를 막아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17. 11. 2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
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